

“감사의 마음 담아”...오월마다 이어진 추모의 땀방울

광주바르게살기운동 회원 50여명 국립5·18민주묘지 묘비닦기 행사 1997년부터 환경정화활동 진행 “민주열사 희생 정신 잊지 않아야”

“오월 영령들의 얼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묘비를 닦았습니다”

7일 오전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이른 아침부터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 회원들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묘비닦기 환경정화활동을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 단체 회원 50여명은 민주의를 지나 5·18민주항쟁 추모탑 앞에서 영령들께 잡배를 마친 후 묘역에 들어섰다.

회원들은 마른천으로 묘비석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으며 연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되뇌며 민주열사들을 애도했다.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 회원들이 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김선일(77)씨는 “5·18민주항쟁 당시 임신 9개월차 아내를 두고 떠난 동생이 이곳에 있다. 매년 방문하지만 올때마다 눈물이 난다”며 “옆에 계시는 다른 영령들과

도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양승곤(57)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 수석부회장은 “5·18민주화운동

이 벌써 45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얼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묘비를 닦았다”며 “민주열사분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대한민국

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5·18의 슬픔과 광주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협의회는 지난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 완공시부터 올해까지 매년 묘비닦기는 물론 참배객 안내, 민주묘지 입구 청소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각 자치구협의회도 5월이 되면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석우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장은 “국립5·18민주묘지는 광주의 아픔이 서려있는 장소이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전국에서 오는 추모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매년 참배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도 오는 5·18주간에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과 추석 명절 이전에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주먹밥 만들기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승우 기자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학생 정신건강 사각지대 최소화”

병원형Wee센터·마음바우처 등 프로그램 운영 통해 맞춤형 지원 진단·상담·치료·교육 원스톱 체계

‘중고교 학생 흥기난동·광주전남은 안전한가?’를 다룬 본보의 보도(본보 4월 30일 7면)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마련 등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병원형 Wee센터 운영과 마음바우처 사업, 권역별 마음건강증진센터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와 과 우울증 경험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

응해 학교-Wee센터-병원형Wee센터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조선대학교병원과 국립나주병원과 협력해 개소한 병원형 Wee센터 2곳은 진단·상담·치료·교육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64명의 학생이 총 633회 상담을 받았다. 이 중 학생 5명에게는 학업 중단이 없도록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 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자살 시도 학생 등에게 외래·상담비 최대 100만원, 입원 치료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013건, 총 10억365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344건이 지원됐다.

올해는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권역별 거점센터인 ‘마음건강

증진센터’ 3곳이 운영을 시작했다. 조선간호대학교(동부권역), 국립나주병원(서부권역), 전남대학교(광산권역)가 참여했다. 각 센터는 위기학생 심층평가와 상담, 사례관리, 교직원·학부모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사회정서교육이 올해 처음 도입돼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과 학생회와의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오는 23일에는 ‘ADHD와 가족치료’를 주제로 한 비대면 연수가 열릴 예정이다.

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며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전남연구원 “지방재정 시스템 친환경 전환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확대 법률개정 지자체 제도 도입 의무화 감축효과 산정 방법 고도화 등 제안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서 녹색예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더욱 더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친환경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확대 및 정착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이 7일 발간한 ‘JNI 이슈리포트- 전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601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8%에 달한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12건 늘어난 219건의 사업에 배정됐으며, 예상 감축량은 215만2000톤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58만4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예산을 통해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 반영하고, 실제 집행 후 효과를 따지는 순환 구조로 이뤄져 단순한 회계 도구가 아닌 탄소중립 이행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난 2023년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의 회계예산에 대해 시범 작성한 뒤 2024년부터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을 작성했다. 이에 올해 총 3812개 사업 중 219개 사업이 감축사업으로 분류됐으며, 예산 1억원당 감축량도 88만9000톤으로 전년 대비 18만1000톤 향상됐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지방정부에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아직 법적 근거 마련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활용 중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 실행 중이어서다.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2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전라남도 또한 기본조례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개별 조례를 제정한 곳은 순천과 나주, 광양, 구례 등 4곳에 불과하다.

관련 제도가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목표 지향적인 제정 운용 제도인 만큼 예산 수립 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 단계까지 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전라남도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결산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감축효과 산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전력 사용량이나 차량 수 등으로 정량 계산이 가능한 사업만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숲 조성이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처럼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는 사업은 정성사업으로 분류돼 평가에서 소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조성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축산정방식을 지속 발굴하고, 감축·배출이 혼합된 사업은 세분화해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세부 항목 안에 감축 요소와 배출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연구원은 “현재 관련 제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인식 수준이 낮고 감축사업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상이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감축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함께 따져야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도민 의견 반영 정책 공모

30일까지...7월께 수상자 14명 발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지역경비 등 일상 속 자치경찰 사무로 전남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경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을 통해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참여 가능하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www.jeonnam.go.kr/jnapc) 회원가입 후 작

성한 제안서를 ‘정책공모전’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7월께 발표할 계획이며, 수상자 14명에게 총 550만원(도민 300만원·공무원 250만원)의 상금과 전남 자치경찰위원장상을 수여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에서 총 41건의 우수 제안작을 선정했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체계 구축(2021년 최우수) △견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참여 순찰 제도(2022년 최우수) △성범죄 피해에 대한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024년 장려상)는 실제 치안 정책으로 반영했다. 또한 △신호등 예고신호로 교통사고 예방 등 5건은 정책반영 가능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우수 제안도 관련 부서 검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치안정책 수립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자치경찰정책과(061-286-2973)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앞으로도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선에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전남을 만들겠다”며 “도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